미국 “알래스카 LNG 사라” …구매도 거절도 난처한 한국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실질적 계약 못 맺고 ‘빈손 귀국’
대미 통상협상 레버리지 활용 관측…투자 리스크도 고려

“한국이 가스(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위해) 선박, 파이프, 철강 모듈 등을 공급하려는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알래스카산 가스를 구매하는 것이 핵심 열쇠입니다.”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지난 26일 국내외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이 동맹 관계와 에너지 안보, 경제성, 통상 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적극 뛰어들 필요가 있으며, 그 출발점은 알래스카산 LNG 구매라고 강조했다.

던리비 주지사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 측의 메시지는 한층 분명해졌다.

그는 방한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내세우면서 LNG 프로젝트와 한미간 관세 협상을 연계하는 발언도 내놨다. 단순한 주(州) 정부 차원의 ‘세일즈 투어’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경제·에너지 외교 특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이번 방한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던리비 주지사는 서울을 떠나기 전까지 LOI(투자의향서) 체결 등 실질적 협력 약속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나 에너지·철강 관련 기업 가운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진전된 계약이나 약속을 내놓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둘러싼 한국의 딜레마적 입장과 맞물려 있다.

한국으로선 대미 관세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미국 측의 투자·구매 요구를 무시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동시에 현재 추정치만 440억달러(약 6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뜻 발을 담그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실제로 알래스카산 LNG 구입은 정부가 대미 무역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력하게 검토 중인 옵션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LNG 수입국 3위인 한국은 최근 카타르·오만 등과의 장기계약이 종료되면서 도입선을 재조정 중이다. 전체 물량의 약 80%를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 역시 신규 공급처 확보에 나선 상태다.

가격 등 사업성만 확보된다면 알래스카산 가스 구매도 불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던리비 주지사도 방한 기간 가스공사 최고경영진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직 알래스카산 LNG 도입 여부나 도입 가능 물량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다음 달 2일 이후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조치의 윤곽이 드러나고 대미 협상이 본격화하면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언론과 통화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아직 본격 착공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물량이 도입되더라도 시점은 수년 후가 될 것”이라며 “수입 물량이나 단가 등에 대해 조금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로서는 지분 투자나 LNG 장기구매 계약 등을 포함한 투자금 조달 방법, LNG 생산 및 판매 가격 등 주요 정보들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위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사업비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에 달한다. 혹한의 환경에서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환경보호 이슈까지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10년대 초반부터 엑손모빌, BP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했지만 수익성과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철수한 전례도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안 들어가자니 미국으로부터 관세 협상 등에서 피해를 볼까 걱정이 되고, 들어가자니 비유하자면 물이 허리까지 잠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에너지 업계의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주 주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린란드 총리 “미국에 병합될 일 없다”

트럼프 ‘100% 병합’ 발언 일축

그린란드를 100% 병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언에 옌스-프레데리크 니엘센〈사진〉 그린란드 신임 총리가 30일(현지시간)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N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린란드를 얻을 것이다. 그렇다. 100%다”라면서 “우리가 무력을 쓰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떤 것도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지 않는다”며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을 옵션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니엘센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얻을 것이라고 한다. 분명히 밝혀두겠다. 미국은 그걸(그린란드) 얻지 못한다”고 썼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28일 그린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덴마크가 그린란드 안보 투자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연합뉴스

국제기구, 미얀마 지진 최고등급 비상사태 선포

WHO, 117억원 긴급자금지원 요청…적십자, 1699억 긴급 모금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 국제기구들이 미얀마 강진 피해 대응을 위해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WHO는 30일(현지시간) 미얀마 지진을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800만 달러(약 117억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WHO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긴급 대응 체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3급 비상사태’로 분류했다”며 “미얀마 내 부상자와 외상 환자가 많고 의료 환경이 열악해 질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와 식수 공급 중단과 의료 접근성이 악화로 질병 발병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외상 환자는 감염 및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긴급 치료와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WHO는 향후 30일간의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해 800만 달러가 필요하다며 “생명을 구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며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자금이 즉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FRC도 미얀마 강진 피해를 돕기 위해 1억 스위스프랑(약 1억1500만달러·한화로 약 1669억원) 규모의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IFRC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향후 24개월 동안 10만명(2만 가구)에게 생명 구호와 초기 복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더 마테우 IFRC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번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존의 취약성 위에 겹친 복잡한 인도적 위기”라며 “미얀마는 여전히 내부 이주민과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이번 지진으로 상황이 한층 더 악화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대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FRC 미얀마 지부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수색·구조 작업을 시작했으며 응급처치와 병원 전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담요와 방수포, 위생 키트 등의 긴급 구호 물품을 배급하고 이동식 보건팀을 배치하는 등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WHO와 IFRC 모두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WHO는 “즉각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이미 취약한 보건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IFRC는 “기온이 오르고 있는 데다 몬순 시즌이 몇 주 안으로 다가와 2차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확률을 36%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독일 총리 “EU, 美 관세에 하나로 대응할 것”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30일(현지시간)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와 같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유럽연합(EU)은 하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하노버 산업 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유럽의 목표는 여전히 협력”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계획에 대해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답은 더 많은 자유무역과 더 큰 경쟁력, 더 많은 기술 주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순진하지도 않지만 약하지도 않다며 “무역전쟁은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숄츠 총리는 올해 박람회의 파트너 국가인 캐나다에 대해선 “캐나다는 속국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독립국”이라며 “우리는 당신 편에 서 있다”라고도 했다.

합병 가능성을 내비치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에 이어, 4월 2일 상호 관세도 예고했다.

철강과 자동차 모두 EU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높은 부가가치세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온 만큼 상호관세 역시 EU가 주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